

글로벌대학30 사업의 현황과 과제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the Glocal University 30 Project

정재연*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글로벌대학30 사업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방안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로벌대학30 사업은 지방대학의 재정 안정성과 혁신 촉진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으나, 사업의 지속가능성, 지역 간 불균형, 성과관리 체계의 미비, 정책 일관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정책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여섯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예산 배정이 필요하며, 연차평가에 따른 차등 배분이 이루어지더라도 일정 비율은 조기 집행되어야 한다. 둘째, 미선정 대학에 대한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과 RISE 체계의 재구조화가 요구된다. 셋째, 글로벌대학30과 라이즈(RISE)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혁신 생태계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 넷째, 사업의 목표를 현실화하고, 대학 유형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차등적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 기여도 및 영향력(IMPACT) 평가 지표를 고도화하여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정책성적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실질적 참여와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가 글로벌대학 사업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이 일회성 재정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역 혁신 생태계를 이끄는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향후에는 중앙정부·지자체·대학 간의 거버넌스 구조를 정교화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를 제도화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핵심어 글로벌대학30, RISE 체계, 지방대학, 지역혁신, 고등교육정책,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 차례**
- 서론
 -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선행 연구
 - 글로벌대학30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 글로벌대학30 사업의 개선방안
 - 마무리와 제언

1. 서론

1970년 한 해 출생인구가 101만 명 정도였고, 2022년에는 25만 명 정도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에 의하여 대학생의 주요 연령대인 20~24세의 인구는 2022년에 310만 명 수준이었으나, 2040년에는 188만 명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

이러한 인구절벽 시대의 도래는 곧 대학 입학자원의

* 이 논문은 2022년도 강원대학교 대학회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in 2022).

** 강원대학교 총장,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¹ 국가통계포털 누리집 참조. <https://kosis.kr>

감소를 초래하게 되었고, 그 파장은 바로 대학의 재정 악화를 유발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대학 운영 전반에 험난한 전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지역 사회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²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의 입학정원 미달 현상을 가속화시키며, 특히 지방대학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이어졌다. 실제로 2024학년도 대입 정사에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 미달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었던 반면, 지방대학은 다수의 학과가 학생 충원에 실패하였다. 또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심화시켰다. 우수한 인재와 자원이 서울·수도권으로 흡수되면서, 지방대학은 교육·연구 경쟁력뿐 아니라 지역 사회 발전의 핵심축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방대학의 생존 문제는 지역사회의 경제와 인프라까지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이 지역사회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경제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대학의 쇠퇴는 지역 경제의 침체와 인구 유출로 이어지며, 지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³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글로벌대학30’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2025년까지 전국 30개 비수도권 대학을 지정하여, 대학당 약 1,000억 원(통합형은 1,500억 원)을 5년간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글로벌대학30 사업은 지방대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해 지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방대학이 지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각 대학이 지역 산업과 특성에 맞는 글로벌 혁신 역량을 키우고, 자

율적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글로벌 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재정 지원을 받아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글로벌대학30 사업은 출발부터 다양한 비판과 우려가 존재하였다. 지방대 중에서도 규모가 크고 경쟁력이 있는 대학이 선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글로벌 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이 제기되었다. 209개의 지방 대학 중 30개가 지원받기 때문에 약 180여개의 대학이 글로벌 대학에서 제외된다. 한편 선택과 집중이 대학구조개혁에 있어 불가피한 면이 있다하더라도 글로벌 대학 사업이 과연 한국대학의 고질적인 문제인 대학서열체제와 인서울/지방대의 구조적 격차를 타파할 정도의 예산과 비전이 있느냐에 대한 비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⁴

이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대학30 사업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며,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이 단기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구조를 넘어, 지역 혁신의 앵커기관(Anchor Institution)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선행 연구

역대 정부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였다. 참여정부는 지역대학 지원정책의 원형을 제시했으나, 지자체 참여기제가 미비했다. 이명박 정부는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대학 자체 혁신보다는 단기적 성과에 집중했다. 박근혜 정부는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을 통해 지방정부 역할을 확대했으나, 행정·재정 기반이 부족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자체를 핵심 주체로

2 윤창훈, 「글로벌시대의 지방대학 혁신」, 『충북 ISSUE&TREND』 53, 충북연구원, 2023.

3 채운정,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의 전망과 과제: RISE와 글로벌대학 30 정책 추진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논문지』 24(9), 한국산학기술학회, 2023.

4 김종영, 「글로벌 대학과 라이즈 사업의 의의와 한계: 대학구조개혁의 종합적 이해」, 『담론201』 27(3), 한국사회역사학회, 2024, 259~260쪽.

격상시켰으나, 실제 역량 부족으로 대학 주도의 사업으로 귀결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대학30 사업은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자체 주도로 전환되는 RISE 체계와 함께 등장하였다.⁵ 글로벌대학30 사업이 시작되자 이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이 분야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변기용, 임가람, 김현주의 연구가 있다.⁶ 이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존립 위기에 처한 한국의 지역사회와 대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라이즈(RISE) 체계와 글로벌대학 30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진은 정책 연구 보고서, 관련 논문, 포럼 및 세미나 자료, 언론 보도 등 다양한 정책 자료에 대한 학습과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이들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는 대학 보직 교수와 정책 과정 참여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정책 설계와 집행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들 정책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RISE 체계와 글로벌대학30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명확한 역할 분담, 공정성에만 치우친 선정에서 벗어나 선정의 타당성과 체계적 성과 관리 체계 구축, 글로벌대학30 사업과 라이즈 체계의 연계가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순 논리에서 벗어나 지역 내 대학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강화하여 건전한 고등교육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지원과 재정지원이 개별 대학의 특성화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한 개선 방안도 함께 제안되었다.

다음으로 김종영의 연구가 있다.⁷ 이 논문은 역사적 제

도주의 관점에서 연구중심대학과 지역 혁신 체제를 지향하는 글로벌대학과 라이즈 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먼저 글로벌대학과 라이즈 사업의 중요성을 규정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역사적 제도주의를 제시하였다. 이어 두 사업의 사례적 배경과 정책적 개요를 검토하면서, 기존의 대학구조개혁 정책과의 차별성을 규명하였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이들 사업은 지난 20여 년 간의 정부 대학 지원 정책과 비교할 때 예산 규모와 목표의 야심 면에서 가장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시민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해 다양한 논란을 야기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드러나는 글로벌대학과 라이즈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고, 한국대학의 구조개혁과 새로운 제도적 경로 창출을 위해 종합적 마스터플랜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서영인을 비롯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은 글로벌대학30 사업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보완 과제를 도출하였다.⁸ 연구 결과, 첫째, 글로벌대학 지원 대상과 규모에 대한 객관적 근거 마련, 둘째, 지원 예산 규모의 충분성과 적절성에 대한 분석, 셋째, 성과관리 및 공개 방안의 구체화와 적절한 지표 개발, 넷째,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 강화가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는 글로벌대학 정책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객관적 연구에 기반한 정책 보완이 불가피함을 보여준다. 나아가 글로벌대학이 지역 발전의 앵커기관(Anchor Institution)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지원 방안과 제도적·정책적 개선 과제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 내용은 여섯 가지로 체계화되었다. 우선 대학과 지역발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편, 『새로운 시대 균형발전 전략 및 실행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6 변기용 외, 「대학 구조개혁과 중앙정부, 지자체의 역할」, 『교육정치학연구』 31(4), 한국교육정치학회, 2024, 245~277쪽.

7 김종영, 「글로벌 대학과 라이즈 사업의 의의와 한계: 대학구조개혁의 종합적 이해」, 『담론201』 27(3), 한국사회역사학회, 2024, 235~277쪽.

8 서영인 외, 『지역주도 시대 글로벌대학 지원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24.

전의 관계, 글로벌대학의 개념과 의의, 유형과 특징, 그리고 정책적 차별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글로벌대학의 현황과 쟁점을 도출하기 위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인구, 경제, 산업 및 R&D 현황),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개별 글로벌대학의 학생 규모, 재정 여건, 산학협력 실적, 글로벌 랭킹, 법령 및 자치법규, 전담 조직과 같은 제도적 인프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 관련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황영식은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진행 상황과 전망을 토대로 앞으로 국내 고등교육 환경에 미칠 파급력을 검토하고, 장기적인 대학 재구조화 방향성을 살펴보았다.⁹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대학30 사업은 현재의 대학구조를 지역별 거점대학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지역 내 헤게모니를 쥐고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지방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글로벌대학30 사업은 이들이 지역별·권역별 허브를 구축하는데 재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내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글로벌대학30 사업은 재정지원이라는 외부 요인을 통해 사립대학의 특성화를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규모가 작거나 영세한 대학을 중심으로 합종연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통합·연합 전략 등을 제시하면서 장기적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셋째, 지역별로 거점 대학 2-3개, 주요 사립대 3-4개를 중심으로 장기적 생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며, 현재의 대학은 전체 규모가 1/2~1/3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을 지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고등교육 환경의 개편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일선 대학 간 통폐합, 향후 구조조정 방향성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령기 인구변화 및 대학 지표 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미래의 지역별 고등교육 재편의 성격과 방향성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김희성의 논의가 있다.¹⁰ 그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주도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추진 중인데, 그 대표 사례로 교육부가 대학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격적으로 전환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를 도입하였고,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지역·산업과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혁신 선도 대학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지방대학의 새로운 책무로서 지역사회 및 경제에 대한 기여가 이슈화되며 이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영향력 평가(IMPACT)가 시도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에 기반을 두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이라는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선정된 글로벌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성과지표에 대해 분석하고 대학의 지역사회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결과와 쟁점사항을 고려하여 국내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사회 기여도 관련 데이터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자체-대학 차원의 데이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산업 구조, 인구구조 등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지역 내 대학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대학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과 산업 구조를 고려한 특정 지역의 주력 산업과 연계된 대학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 셋째, 대학의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포착할 수 있는 지표 보완이 필요하며, 대학의 사회적 책임, 경제적 책임, 환경적 책임을 균

9 황영식, 「글로벌30 사업과 지역대학의 구조조정 전망」, 『고등교육』 7(2), (사)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 181~215쪽.

10 김희성, 「글로벌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도 지표 분석 및 향후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34(1),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25.

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단기 성과 위주가 아닌 대학의 장기적인 지역발전 기여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보완하고, 이러한 지표들이 지자체 및 국가 차원의 정책 개발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표의 활용 및 환류체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글로벌대학30 사업과 관련된 주요 연구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구조개혁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역 거버넌스와 제도적 기반의 정립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RISE 체계와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의 성과관리 및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지표의 표준화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단기적 예산사업이 아닌 장기적이고 제도화된 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지역 내 대학간 상호보완적 협력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사점은 향후 글로벌대학과 RISE 체계가 단순한 정책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혁신과 고등교육의 구조적 전환을 견인하는 통합 거버넌스 모델로 발전하기 위한 핵심 방향성을 제시한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한계를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이 사업이 갖는 구조적 조건과 잠재적 쟁점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 추진의 실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한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제기된 한계와 비판을 넘어,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작업 역시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글로벌대학30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글로벌대학30 사업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것은 단순히 글로벌대학30 사업의 현황을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대학이 지역 혁신의 앵커

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나아가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제기된 이론적 논의와 정책 제언을 실제 사업 추진 측면에서 보완함으로써, 글로벌대학30 사업이 단기적 재정지원에 머물지 않고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 체제 개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글로벌대학30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3.1. 글로벌대학30 사업의 현황

교육부는 2025년 5월 27일 2025년 글로벌대학 예비 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5년 글로벌대학 예비 지정 신청에 총 81개교가 55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5.2. 신청 마감)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단독 신청 37개(37개교),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5개(10개교), 연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13개(34개교)가 제출되었다.¹¹

2025년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총 18개(25개교) 혁신기획서가 선정되었다. 이 중 4개는 2024년 본 지정 평가시 미지정된 대학으로, 평가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통해 기존 혁신 모델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추진계획을 개선·발전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예비지정 자격을 유지하였다. 이와 함께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상위 14개를 예비지정 대학으로 결정하였다.¹²

2025년 9월 말 글로벌대학 3년 차 사업 대상으로 7곳(9개교)이 최종 선정되었다. 이로써 2023년 10곳(13개교), 2024년 10곳(17개교)을 포함해 총 27곳(39개교)의 사업대상이 마무리되었다. 2025년에 10곳 내외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혁신성·차별성이 있는 7곳만 최종 선정하였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었다. 글로벌대학30 사

11 교육부 누리집 참조. <https://www.moe.go.kr/boardCnts>

12 교육부 누리집 참조. <https://www.moe.go.kr/boardCnts>

업 선정 현황은 <표 1>과 같다.¹³

<표 1> 글로벌대학 선정 현황

선정 연도	통합형	연합형	단독형
2023년	강원대·강릉원주대, 부산대·부산교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충북대·한국교통대 (4곳)		경상국립대, 순천대, 울산대, 전북대, 포항공대, 한림대 (6곳)
2024년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한국승강기대, 원광대·원광보건대 (2곳)	동아대·동서대,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2곳)	건양대, 경북대, 국립목포대, 대구한의대, 인제대, 한동대 (6곳)
2025년	조선대·조선간호대, 충남대·국립공주대 (2곳)		경성대, 순천향대, 전남대, 제주대, 한서대 (5곳)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저자 정리

글로벌대학 최종 선정 후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홀대론과 함께 미선정대학에 대한 낙인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러한 구조적 편중은 대학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학생들에게 ‘낙인효과(stigmatization)’를 불러일으켜 심각한 파급효과를 낳는다. 실제로 글로벌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대규모 재정 지원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반면, 탈락한 대학은 지역사회에서 “경쟁력이 낮은 대학”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얻게 되어 우수 신입생 모집, 산학 협력 기회 확보, 지자체 협력 관계 형성 등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을 겪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지역 고등교육 체제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와도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혁신성보다는 지역 안배와 거점국립대 밀어주기 식 선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1·2차 선정 시 배제되었던 대전·광주·제주에 모두 4곳이 3차에 선정되었으며, 거점국립대 중 미선정되었던 충남대·전남대·제주

대가 마지막에 선정됨으로써 정책적인 변수가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2. 글로벌대학30 사업의 문제점

3.2.1. 글로벌대학30 예산 배정의 문제점

한 언론사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의뢰해 입수한 ‘글로벌대학 지원금 교부현황(2023~2024년)’에 따르면 2023년 첫 지정된 10개 글로벌대학이 2024년까지 평균 176억90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대학 사업이 당초 한 대학당 5년간 총 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목표였던 점을 감안하면 초기 지원금 집행이 매우 적게 이뤄진 것이다. 2023년 지정된 글로벌대학의 지원금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강원대·강릉원주대와 충북대·한국교통대가 1차연도에 80억 원, 2차연도에는 150억 원을 지원받았다. 또 부산대·부산교대는 79억 원과 150억 원, 국립경국대는 40억 원과 150억 원을 받았다. 순천대, 울산대, 포항공대, 한림대는 1차연도에 50억 원과 2차연도에 100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 외 경상국립대와 전북대는 첫해에 50억 원을, 지난해에 95억 원을 받았다. 2024년 지정된 글로벌대학의 경우 창원대·도립거창대·도립남해대·승강기대는 8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원광대·원광보건대, 건양대, 경북대, 목포대, 동아대·동서대, 대구·광주·대전보건대, 대구한의대, 인제대, 한동대는 각각 50억씩을 받았다.¹⁴

이렇듯 1차 연도와 2차 연도에 예산 지원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것도 문제이지만 사업비 교부도 1차 연도는 2024년 1월, 2차 연도는 2024년 11월 초에 이루어짐으로써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촉박해 당초 계획했던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3차 연도도 조금 앞당겨지기는 하였지만 2025년 10월이 되어서야 전체 예산이 배정되었다.

13 교육부 누리집 참조. <https://www.moe.go.kr/boardCnts>

14 <https://www.etoday.co.kr/news/view/2484557>

3.2.2.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에 대한 대책

지역의 대부분 대학이 대학의 명운을 걸고 도전한 글로벌대학30 사업 대상이 최종 선정됨으로써 총 39개교가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대부분의 지역대학이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참여하려고 대학의 역량을 다 쏟아 끝까지 최선을 다한 이유는 5년간 1,00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경쟁력이 없는 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힐 우려가 컸기 때문일 것이다.

최종 선정 발표가 난 이후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법인이사회와 대학 총장 간 책임 공방이 일고 있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승선한 대학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겠지만 미선정된 대학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대학30 사업에서 배제된 수도권 대학에 대한 역할별 문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3.2.3. 글로벌대학30 사업과 라이즈체계의 연계성 문제

지자체가 주도하는 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이라는 라이즈 체계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서는 2023년부터 도입된 글로벌대학30 사업과 라이즈 체계 도입을 긴밀히 연계하여, 이 두 가지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라이즈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라이즈 체계 내에서 글로벌대학30 사업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역 내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만약 두 가지 정책(사업) 간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이를 위한 합리적 조정 메커니즘 마련도 필요하다.¹⁵

〈표 2〉 글로벌대학 30과 라이즈 사업의 개요와 의의¹⁶

구분	글로벌대학30	라이즈
사업의 목표	- 지방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 - 대학구조개혁 정책	- 지역혁신체제 - 지산학(산학관) 연계
사업의 필요성	- 대학 경쟁력 확보 - 국가균형발전: 지방 소멸 대응 - 국가와 지자체의 대학 지원 역할 강화	- 지역-대학의 공동 위기 극복 - 인재 양성-취업·창업-정주의 선순환발전 생태계구축 - 지역의 특성화 발전
사업의 주체	- 지방 대학 - 총 30개 대학 선정 - 1차년 10개 대학 선정 - 2차년 10개 대학 선정 - 3차, 4차년 각 5개 대학 선정	- 지자체 - 지자체가 라이즈 센터 설치 - 1차 7개 시범지역 선정 - 중앙 라이즈 센터(한국연구재단)와의 연계 - 교육부의 성과 관리
예산	- 대학당 1,000억(1년 200억*5년) - 총 3조 내외	- 대학 재정지원사업 통합(RIS, LINC 3.0, LiFE, HiVE,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 1년 총 2조원 내외
핵심 전략	- 선택과 집중. 선별적 대학 지원 - 대학 내-외부의 벽 허물기 - 수요자 관점의 대학혁신지원 - 범부처·지자체 간 장벽없는 지원	- 지자체의 라이즈 센터를 중심으로 재정과 전략 구성 - 지역 내 여러 대학을 지원. 포용적 대학 지원. - 지자체 간의 경쟁 - 지역혁신체제의 다양성 확보
법적 근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의의	- 구조에 대항하는 가능성의 예술로서의 정치(정치권력을 통한 모순된 구조의 변화) - 지방대 특성화와 연구중심대학화(행위자 역량 강화) - 지산학 연계 강화와 지방 산업 활성화를 통한 수도권/지방 양극화 극복(모순된 구조를 교정하려는 시도) - 대학의 구조조정과 효율성 증대(행위자 역량 강화) - 지역 인재 양성(지식경제로의 구조 전환에 따른 적극적 대응)	- 지방 소멸 대응 전략(새로운 경로 전환을 위한 정치적 노력) - 지식경제 중심의 지방 산업 경쟁력 강화(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구조 정책, 지방의 실리콘 밸리화) - 수도권/지방 산업의 양극화 해소(구조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 정책) - 창조 계급의 창출을 통한 창조도시의 창출(인적 자본의 확보를 통한 행위자와 공동체의 역량 강화)

글로벌대학30 사업과 라이즈체계는 지역과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대학30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인 반면 라이즈체계는 지자체 주도의 지역대학 육성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발전을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15 변기용 외, 「대학 구조개혁과 중앙정부, 지자체의 역할」, 『교육정치학연구』 31(4), 한국교육정치학회, 2024, 257~258쪽.

16 김종영, 「글로벌 대학과 라이즈 사업의 의의와 한계: 대학구조개혁의 종합적 이해」, 『담론201』 27(3), 한국사회역사학회, 2024, 258쪽.

컬대학30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39개 지역 대학에 불과하지만 라이즈체계에는 수도권 대학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2025년부터 라이즈체계가 전 광역시·도에서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대학30 사업과 라이즈체계의 연계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글로벌대학30 사업이 라이즈체계의 핵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이 사업비를 라이즈체계를 통해 지원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라이즈체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3.2.4. 글로벌대학30 사업의 목표에 대한 이해

글로벌대학30 사업은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연계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의 대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국가-지역-대학의 세계적 경쟁력 동반 상승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총 27곳 중 10곳(37%)이 통합형(8곳) 또는 연합형(2곳)으로서 글로벌대학30 사업이 대학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학의 한 관계자가 “글로벌대학30 사업의 본래의 취지가 지역소멸, 지역대학 활성화라는 큰 아젠다로부터 도출된 사업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대학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한다”고 지적한 기사¹⁷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대학30 사업은 학과 간, 대학-지역·산업 간, 국내·외 간 벽 허물기, 대학-지자체-지역 산업계 탄탄한 파트너십 구축, 글로벌 수준의 대학-지역 동반 성장 모델 선도라는 3가지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표 3〉과 〈표 4〉의 예비지정 및 본지점 평가 주안점을 보

17 <https://www.us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29240>

〈표 3〉 글로벌대학30 사업 예비지정 평가 기준¹⁸

영역	평가주안점
혁신성 (6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의 비전과 목표는 기존 대학 운영의 틀을 넘어 과감하고 도전적인가? • 제시한 혁신계획에 따르면, 해당 대학이 한국의 대학혁신을 대표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인가? • 산학협력 허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는가? • 대학 안·밖, 대학 내부(학과, 교수)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가 혁신적인가? • 설립 유형·규모 등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대학 유형에 따라 특성 및 지역에서의 역할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의 혁신성 평가
성과관리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혁신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는가? • 혁신계획의 실행에 따른 자율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은 적절한가?
지역적 특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혁신계획이 지역의 발전 전략과 연계되어 있으며, 지역과 지역 내 다른 대학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가? • 대학이 지역 혁신 허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대학, 지자체, 산업계의 역할은 명확하며 실행 가능한가?

〈표 4〉 글로벌대학30 사업 본지점 평가 기준¹⁹

영역	평가주안점
대학 실행 계획 (7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대학 실행계획은 예비지정 때 제시한 과감하고 도전적인 비전 및 목표에 근거하여 수립하였는가? • 글로벌대학의 비전 및 목표, 혁신전략은 지역발전 전략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가? • 글로벌대학의 실행계획은 대학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타당성, 구체성, 실행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글로벌대학의 혁신전략 및 실행계획은 대학 구성원 간 합의와 소통의 결과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는가? • 글로벌대학의 연차별 실행계획 및 재정 확보방안은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혁신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는가? • 혁신계획의 실행에 따른 자율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은 적절한가?
지자체의 지원 및 투자계획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혁신계획이 지역의 발전 전략과 연계되어 있으며, 지역과 지역 내 다른 대학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가? • 대학이 지역 혁신 허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대학, 지자체, 산업계의 역할은 명확하며 실행 가능한가?

더라도 글로벌대학30 사업은 교육혁신, 연구혁신, 자산학 협력, 글로벌 협력, 대학 통합 및 재정 혁신 등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을 알 수 있다.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지역대학의 과감한 혁신을 유도하고, 이

18 교육부 보도자료, 『2025 글로벌대학 지정계획』, 교육부, 2025.

19 교육부 보도자료, 『2025 글로벌대학 지정계획』, 교육부, 2025.

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3.2.5. 지역기여도의 확인 문제

교육부의 글로벌대학 추진방안(2023.4)²⁰에 따르면 대학의 지역 산업·사회 협력 결과에 따른 지역기여도 및 영향력(Impact)의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산업·경제·문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대학의 기여도와 영향력을 계량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산출·분석하는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역기여도 및 영향력(Impact) 확인의 가능성이다. 일반적으로 영향력(Impact) 평가는 정책 추진에 따라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그 거시적인 수준의 변화치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적 영향력을 확인하는 질적인 지표로는 평화, 제도적 기반, 파트너십, 건강과 웰빙 등에 관한 것도 있지만 경제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빈곤 퇴치, 기아 제로, 불평등 감소, 일자리와 경제성장과 같은 정량적인 지표들이 활용되고 있다. 이 중 경제적 영향력을 확인하는 대표적 지표로 지역내총생산(GRDP)을 활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GRDP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 산업 기반(산업체 및 산업체 창출, 경제적 성과 등)과 지식 인프라(대학수, 연구자수, 연구 및 교육기관수 등)이므로 이미 기반이 잘 구축된 지역에서는 글로벌대학 정책을 통한 영향력을 도출하기 한계가 있으며, 기반이 비교적 열악한 지역이라 해도 연간 200억 원, 5년간 총 1,000억 원의 투입이 적은 예산이 아님에도 대규모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움직이기에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여라 볼 수 있다. 영향력 평가는 향후 사업 기간 이후 지속적인 지자체 투자를 끌어내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²¹

글로벌대학30 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지역 기여도 및 영향력(Impact) 분석에 대한 자료조사 및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된 바 없다.

3.2.6. 지자체와의 협력 기반 미비와 지속가능성 문제

글로벌대학30 사업 계획에는 지자체는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위해 글로벌대학에 집중투자 및 지원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글로벌대학의 운영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²²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글로벌대학30 사업 선정을 위한 소극적인 대응자금 투자만을 하고 있고, 경상북도가 국립경국대의 통합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사례를 제외하고는 글로벌대학 재정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일부 지자체는 고등교육에 대한 이해나 역량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협력보다는 명목상 참여에 그치고 있으며, 지자체가 지원하는 대응 자금도 대학의 혁신에 사용되기보다는 지원한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집행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안고 있는 한계점이기도 하지만 글로벌대학30 사업도 단기적인 지원 구조(5년간 지원)를 벗어나지 못했다. 2023년 선정 대학은 1차년도 예산을 2024년 1월에 배정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년 만에 혁신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사업 종료 이후 재정 자립 방안이 취약하여 사업 종료 후 지속가능성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 교육부 보도자료, 『글로벌대학30 추진 방안』, 교육부, 2023.

21 서영인 외, 『지역주도 시대 글로벌대학 지원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24, 82쪽.

22 교육부 보도자료, 『글로벌대학30 추진 방안』, 교육부, 2023.

4. 글로벌대학30 사업의 개선방안

4.1. 글로벌대학30 예산의 안정적·조기 배정

글로벌대학30 사업 대상이 모두 확정되었으므로 모든 대학이 계획한 사업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조기에 예산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2025년 예산 배정이 지연된 이유로 연차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만약 연차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차등 배정이 필요하다면 전체 예산의 70%는 최대한 조기 배정하고, 나머지 30%를 평가 후 배정하는 방식을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4.2.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에 대한 지원

일각에서는 글로벌대학30 사업 대상 대학의 수를 늘려 추가로 지원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다.

먼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기한 연장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고특회계를 통해 지원되는 고등교육재정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약 9.74조 원 규모에서 2025년에는 예산안 기준 약 16.38조 원 까지 확대됐다. 이렇게 확대된 고특회계는 각 대학에서 자율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확대, 노후화된 교육·연구 여건 개선, 학생의 학업부담 경감 등을 위해 다방면으로 투입됐다.²³

고특회계의 연장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RISE체계를 재구조화함으로써 지역대학의 지원을 확대하고, 초광역 RISE체계를 통하여 수도권 대학도 비수도권 대학과 협력하여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대학30 미션정대학의 낙인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RISE체계에서 우수한 혁신성과를 창출한 대학을

‘(가칭)지역혁신 선도대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3. 글로벌대학30 사업과 라이즈체계의 연계방안

글로벌대학은 본래 라이즈(RISE) 정책의 일환으로 기획된 사업인 만큼, 단순히 개별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넘어 지역 혁신 생태계의 허브(hub)로서 기능해야 한다. 즉, 지역 내에서 대학이 인재를 양성하고, 졸업생의 지역 내 취·창업을 촉진하며, 나아가 인구소멸 방지와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즉, 글로벌대학은 지역 내의 혁신 거점으로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그 외의 RISE 참여 대학은 각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대학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고등교육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대학30 사업과 라이즈체계가 특정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만 집중되지 않고, 지역 전체의 고등교육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4. 글로벌대학30 사업의 목표 명확화

글로벌대학30 사업은 학과 간, 대학-지역·산업 간, 국내·외 간 벽 허물기, 대학-지자체-지역 산업계 탄탄한 파트너십 구축, 글로벌 수준의 대학-지역 동반성장 모델 선도라는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지, 5년 이내에 세계적인 대학이 되라고 종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글로벌대학은 교육혁신, 연구혁신, 지식학협력, 글로벌 협력, 대학 통합 및 재정 혁신 등 대학의 담대한 혁신 노력과 성과를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글로벌대학마다 혁신의 주안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단독형의 경우에는 대학 자체의 혁신과 더불어 지역/세계와 연계되는 혁신

23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77565>

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나 통합/연합형의 경우에는 대학 통합이라는 것이 어떠한 혁신보다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므로 사업 평가 시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세계적인 대학의 집중육성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확대 추진하여 국가거점국립대를 특성화 분야별 연구중심대학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글로벌대학은 RISE의 혁신 거점으로서 지역 내 타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및 대학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거점국립대학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다층적 육성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4.5. 지역기여도의 확인 문제를 포함한 지표의 개선

산업·경제·문화 등 지역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대학의 기여도와 영향력을 계량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산출·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여도 및 영향력(Impact) 분석에 대한 대학의 활용가능한 데이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사례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분석 방법을 구축하는 연구를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글로벌대학 30 사업에 적용하기 어렵더라도 향후 RISE체계의 성과를 측정하는 등 다양한 사업에 평가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향력 평가(IMPACT)를 통해 사업의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향후 재정지원여부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IMPACT 평가는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성과를 직접적·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정책의 성과를 단기적 성취에 한정하지 않고 장기적·구조적 변화까지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발

진 기여도, 계약 이행 여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 간의 균형을 반영한 운영 전략이 요구된다. 이는 특정 목표에 과도하게 치중하지 않고, 대학이 지역사회와 세계 무대 모두에서 균형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이다. 다시 말해, 글로벌대학 선정과 운영은 단순한 사업 평가가 아니라, 대학과 지역의 상생 구조를 제도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²⁴

한편, 지역사회와 대학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한 균형 잡힌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글로벌 선정대학들의 지역사회 기여도 지표는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편중되어 있고, 세부 영역에서도 일부 영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설립유형 및 신청유형을 고려하여 글로벌대학 30 프로젝트 본연의 목적 및 대학별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균형 있는 지역사회 기여도 지표 개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²⁵

4.6. 지자체와의 협력 기반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지자체의 역할 강화는 글로벌대학의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다. 지자체가 단순히 행정적 지원자의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중앙정부와 협력하면서 동시에 지역 고등교육 정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책무성과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대학 연계가 활성화되고, 대학이 지역의 실질적 요구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고등교육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향적 지원 구조에 머물렀다면, 글로벌대학은 지역 혁신을 전제로 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주체가 대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대학과 지역 산업, 지자체

24 국회사무처, 서울행정학회 편, 『대학평가 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사무처, 2023.

25 김희성, 「글로벌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도 지표 분석 및 향후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34(1),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25, 24쪽.

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지역사회 전체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교육과 연구를 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정착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글로벌대학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별적인 조례만으로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어렵다. 법률적 차원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재정 지원이 일시적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틀 속에서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으며, 중앙정부-지자체-대학 간 협력 체계 또한 법적 장치를 통해 제도화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법적 기반은 글로벌대학 사업의 장기적 지속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고등교육 정책은 정권 변화나 단기적 재정 상황에 따라 쉽게 변동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업이 일시적 성과에 머물고, 지원 종료 이후 지속성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반면 제도적 법률로 뒷받침될 경우, 글로벌대학은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장기적 고등교육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법적 기반 확립은 글로벌대학 사업을 제도화하여 그 성과를 제도적 구조 속에 안착시키는 핵심 장치라 할 수 있다.

한편,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예산 편성만으로는 사업 성과를 안정적으로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확고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안정적 재정 기반은 대학이 단순히 단기 성과 지표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인 혁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글로벌대학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재정적·제도적·거버넌스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재정 지원이 핵심적이다.

5. 마무리와 제언

글로벌대학30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으로 추진되었다. 그동안의 성과는 지방대학의 재정 안정과 혁신 촉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지속가능성의 한계, 지역 간 불균형, 성과관리 체계의 미비, 정책 일관성 부족 등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신속한 예산 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연차평가에 따른 차등 배분이 필요할 경우에도 일정 비율(예: 70%)은 조기 집행함으로써 대학의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미선정 대학의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RISE 체계를 재구조화하여 지역대학의 혁신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글로벌대학30 사업과 RISE 체계 간의 연계 강화가 요구된다. 두 제도가 상호 보완적 관계로 설계되어야 하며, 글로벌대학은 지역 혁신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합리적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사업 목표의 현실화와 유형별 맞춤형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의 발전은 단기적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 혁신과 협력의 결과로 이해되어야 하며, 국가 거점국립대학 중심의 특성화 분야별 집중 육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이중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 기여도(Impact) 지표의 고도화를 통해 대학의 사회적 책임성과 정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반영하는 균형 잡힌 지표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지역사회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실질적 참여와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가 글로벌대학 사업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인이다.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향 지원구조를 탈피하고, 지자체가 고등교육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재정·거버넌스·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대학 발전모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책적 합의 측면에서, 글로벌대학30 사업은 지역 대학을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앵커 기관(Anchor Institution)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대학정책의 주도권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분권화 흐름을 제도적으로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고등교육이 국제적 경쟁 구도 속에서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결론적으로, 글로벌대학30 사업은 단기적 성과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대규모 사회적 실험이다. 이러한 실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비전과 제도적 기반,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적 학습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비로소 한국 고등교육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편, 『새로운 시대 균형발전 전략 및 실행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 고영훈, 「라이즈 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부의 역할」, 『대학교육』 2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
- 국회사무처·서울행정학회 편, 『대학평가 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사무처, 2023.
- 김종영, 「글로벌 대학과 라이즈 사업의 의의와 한계: 대학구조개혁의 종합적 이해」, 『담론201』 27(3), 한국사회역사학회, 2024.
- 김희성, 「글로벌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도 지표 분석 및 향후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34(1),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25.
- 변기용 외, 「대학 구조개혁과 중앙정부, 지자체의 역할」, 『교육정치학연구』 31(4), 한국교육정치학회, 2024.
- 변기용·이석열·라은종,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체제에 대한메타평가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5(5), 한국교육행정학회, 2017.
- 서영인 외, 『지역주도시대글로벌대학 지원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24.
- 염동기·신현대, 「세계대학 평가체제 개선을 위한 실증분석 및 DEA 평가모형 적용연구」, 『행정논총』 51(4),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2013.
- 윤창훈, 「글로벌시대의 지방대학 혁신」, 『충북 ISSUE&TREND』 53, 충북연구원, 2023.
- 채윤정,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의 전망과 과제: RISE와 글로벌대학 30 정책 추진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논문지』 24(9), 한국산학기술학회, 2023.
- 황영식, 「글로벌30사업과 지역대학의 구조조정 전망」, 『고등교육』 7(2), (사)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

2. 기타 자료

- 국가통계포털누리집. <https://kosis.kr>
- 교육부누리집. <https://www.moe.go.kr/boardCnts>
- 유스라인. <https://www.us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29240>

Abstract**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the Glocal University 30 Project**

Jeong, Jae-Yeon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Glocal University 30 initiative and suggests strategies to improve its sustainability and policy coherence. Introduced as a national response to the declining school-age population and the overconcentration of educational resourc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program has contributed to stabilizing regional universities and stimulating innovation. However, persistent challenges remain, including limited long-term sustainability, regional imbalance, weak performance evaluation, and fragmented policy governance.

Drawing on literature review and policy document analysis, the study identifies six key areas for reform: (1) ensure stable and timely budget distribution with partial pre-allocation to prevent administrative delays; (2) expand regional innovation opportunities by extending the Special Account for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and restructuring the RISE framework; (3) strengthen interconnectivity between the Glocal University 30 and RISE systems to foster a cohesive regional innovation ecosystem; (4) recalibrate project goals and evaluation criteria to reflect institutional diversity and local conditions; (5) refine regional impact (IMPACT) indicators to measure universities' social contributions and policy effectiveness; and (6) institutionalize local government participation and establish a robust legal foundation for long-term sustainability.

Ultimately, this study redefines Glocal University 30 as a transformative, sustainable higher education policy that integrates central, local, and university governance to promote balanced regional innovation and enduring educational competitiveness.

Keywords Glocal University 30, RISE system, regional innovation, higher education policy, sustainability, governance
